

3장 마을만들기(마을 운동)의 방법론

15. (마을운동의 동력과 생활의 필요) 마을은 주민의 생활상의 절실한 필요와 욕구를 이웃과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관계망이다. 생활의 필요란 인간으로서 생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신적 물질적 생활자원 (사회적 최소한, **social minima**)은 물론이고, 인간으로서 자기발전(**human development**)을 꿈꾸고 준비하기 위한 조건을 포함한다. 따라서 마을운동의 동기는 주민들이 생활상의 절실하고 시급한 필요를 해결하려는 욕구로부터 나오며, 이를 이웃의 주민들과 함께 하소연하고 공리하는 일상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협동의 방법으로 해결의 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이다.

마을운동은 생활의 필요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특정의 정치적, 종교적 이념이나 목적 달성을 위한 공동체운동과 구별되며, 다양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상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중요시된다. 또한 마을운동은 일상의 대면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이웃들 간의 관계망이라는 점에서 온라인상의 커뮤니티와도 구별된다.

16. (생활관계망) 마을운동은 생활관계망의 복원으로 시작한다. 우리의 현대사는 공동체적 관계망이 철저히 해체되어온 역사이다. 해방 이후 국가가 주도한 근대화 전략은 압축적인 경제성장, 교육, 보건의료, 주거, 교통 등 대부분의 근대적 과제를 달성했지만, 그 결과로 농촌공동체가 급격히 해체되고, 자본과 토권이 중심이 된 압축적 도시개발정책으로 도농에 걸쳐 공동체적 기반 문화가 철저히 파괴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신자유주의의 거센 물결이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문화 등 전 부문에 파고들어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극단적인 경쟁문화가 일상에 뿌리내리게 되면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배제와 단절이 구조화되고, 사회적 안전망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마을운동은 파괴된 관계망을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 각기 지역사회라는 생활단위에서 일상적인 대면관계를 복원하고, 소통과 협동의 가능성을 찾아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적 생활관계망의 단초를 키워내야 한다. 또한 이렇게 복원되는 관계망은 지역과 동네에 따라 천차만별의 특성을 띠는 것이 당연하므로, 선부론 모델링이나 성급한 제도화를 앞세우기보다는 각양각색의 특성과 불균등성을 존중하는, 다양성이 풍부함이 되도록 품어서 성장시키는, 지역사회의 마을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17. (공론장과 마을공공성) 마을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통하여 형성되고 건강하게 확장된다. 개인의 필요가 이웃의 필요가 될 때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며, 나아가 동네의 필요로 될 때 그 해결의 수준도 높아진다. 필요에 대한 공감의 확장은 주민들의 공식 비공식의 다양한 공론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공론장을 통한 공감의 확대 과정 속에서 개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는 지역사회의 공적 과제로 동의되기도 하고, 지역차원의 새로운 과제가 합의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공적 합의가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지켜주는 공공성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공론장은 우선, 참여하고 싶은 주민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하며, 경제적인 형편이나 처지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론장은 친밀한 이웃들 간의 소소한 소통관계에서부터 지역사회의 공식적인 회의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와 공식성의 정도가 다양하므로, 이러한 다양한 공론장이 지역사회에서 필요에 따라 동시에 그리고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공론장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공론장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대립의 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공론장의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수결은 결정을 내리는 방법으로는 효율적이고, 결정 이후 승복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지만, 다수 주민의 자발성과 참여를 높이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수결을 통한 결정보다는 다수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 합의 과정은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상호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이며, 자신의 의견을 바꾸거나 상대방의 의견과 차이를 조정하는 공유와 공감의 과정이다. 이렇게 도달한 합의는 이후 실행과정에서 협동적 참여의 수준을 보장해주므로 결과적으로는 더욱 효과적인 결실을 얻게 한다. 따라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 할지라도 토론과 합의의 문화를 지켜가고

성숙시켜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18. (살림살이 경제) 관계망의 복원으로 시작하는 마을은 경제화를 지향해야 한다. 시급하고 절실한 생활의 필요를 함께 해결해보는 과정에서 형성된 이웃 관계망은, 그 해결의 방법이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꼴로 진화하도록 노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을경제화이다. 즉 주민의 참여가 소비와 수익으로 나타나고, 책임이 활동비나 임금으로 보상됨으로써, 관계가 물질적인 형태를 띠게 되어 훨씬 견고하고 예측가능하게 된다. 무엇보다 그동안 참여하게 않았던 주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관계망의 확장을 촉진시키고 결국은 문제해결의 방식이 안정되고 나아가 마을관계망이 지속가능해진다.

살림살이경제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유무형 자원의 조달하는 활동이며, 또한 생활의 필요를 함께 해결해가는 이웃들의 관계망이 바로 마을이니, 마을만들기가 곧 살림살이경제를 꾸려가는 것이다.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은 살림살이경제의 관계 속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이자 방법이므로 마을과 지역의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에 더욱 천착하고 지역사회의 협력적 관계망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9. (도시재생) 토건적 개발이 불가능한 시대에,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생으로 도시를 재구성하는 일은 이미 시대적 흐름이며, 도시의 비중이 압도적인 우리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미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철거와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이거나 커뮤니티 시설 건립으로 축소되지 않는다.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오래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활기반을 자립적으로 구축하는 일이다. 주택개량을 비롯한 주거환경의 개선은 물론이고, 보육과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자원을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기반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따라서 이는 마을운동이 지향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마을관계망의 형성이 전제가 되는 않는 재생은 또 다른 토건에 불과하다.

한편 관계망의 회복을 기본으로 하는 마을만들기는 주거와 마을 공간 등의 하드웨어를 마을자산화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재생을 마을만들기의 출구전략으로 다루어 중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을 가져야한다. 즉, 살림살이 경제를 담당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지역(마을)경제를 촉진하고 주거, 환경 등의 물리적인 재생을 담당하는 CDC(공동체개발회사, community development company)나 커뮤니티 신탁 등의 지역개발관리회사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

20. (민관협력) 최근 민선 5기와 6기를 경유하며 지방 정부의 마을공동체 정책은 대세라 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존 풀뿌리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벌이던 때에 비하면 현저하게 마을관계망을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관주도의 부작용이 심각해져 오히려 마을활동을 왜곡하거나 위축시키기도 한다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행정은 그동안 위계적 통치적 활동에 익숙하거나 민간위탁이라는 갑을관계에 젖어있고, 민간 역시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상호간의 신뢰는 낮은 수준이며 협업의 경험도 취약하여 상호 불신으로 인한 건강한 거버넌스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관료제적 행정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안된 시장원리에 입각한 신공공정책은 이미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이 나면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초한 거버넌스(governance, 협치)가 유력한 해법으로 대두되어 전 세계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문제는 그 양상이 복잡하고 원인 역시 단선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으며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과적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 주도적인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는 갈수록 줄어들면서 시민의 참여와 융합적인 해법이 문제해결력을 높인다는 사실이 다양한 사례에서 증명되고 있다.

마을공동체 영역은 대표적인 융합적 및 시민참여형 정책으로서 민과 관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수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행전전달체계를 지양하고 행정의 칸막이를 넘나드는 융복합적 정책 형성을 촉진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시켜야 한다.

21. (지역사회 시민생태계 지향) 마을은 복지, 경제, 문화, 교육, 보건 등등 다양한 의제가 복합적으로 다루어지며, 각각의 영역별 주체들의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간다. 따라서 마을의 힘은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주체들의 협력과 융합적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일상적인 교류와 공감의

네트워크, 즉 지역사회의 시민생태계에서 나온다. 생태계는 다양성과 불균등성이 공존하면서, 이질적 요소들이 우연히 접속하고 협력하게 되는 환경을 특징으로 한다.

동네와 지역사회, 그 보다 더 큰 기초 자치체 수준 등 다양한 위상의 생태계가 병존하며, 문제(의제)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적절한 위상의 생태계에서 논의되고 해법이 모색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 시민생태계는 성숙된다. 이것이 곧 민간(주민) 주도력의 지표이며, 지역사회라는 생태계의 시선으로 마을의 활동과 주체의 등장과 연결을 파악하고 생태계의 성숙도를 높여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토론내용

집필진: 유창복(서울마을공동체지원센터)

좌장: 유창복(서울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서기: 정희영(서울마을공동체지원센터)

토론자: 윤훈상(아산공동체지원센터), 장용석(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이현민(전북마을지원센터), 이세형(광주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 주덕(환경농업가치연구소), 이지훈(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박두호(천안농업회사 두호), 주윤정(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16조 방법론에 대한 총론

-원칙과 실행원칙 사이에서 그래도 실행원칙이 담겼으면 좋겠다. 도시와 농촌의 맥락이 다르고 목표와 방식이 다른데 그 사이의 이야기가 어떻게 담길지 고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체성을 부각했으면 좋겠다. 공동체성을 복원하는 것인지 그 이유로 자발성, 자립성.

-개인의 이해관계로 출발하지만 공공성과 시민성. 그 방법으로 교육과 학습이었으면 하는 내용과 도시재생과 경제 부분에서는 중요한 의제가 들어가지만 주민 참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세부논의내용>

-16조, 생활관계망에 대한 예시는 어떤 방법론에 대한 전략을 염두하고 작성한 것인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것까지 담아야 하나 싶었다. 16조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직접적인 관계망을 복원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 지금은 도시화로 관계망이 너무 파괴되어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시작은 생활이다. 생활을 시작으로 담아 함께 공론하는 것. 그래서 셋이든 넷이든 모여 대화하는 공론장을 그 다음 17조에 담았다.

-예를 들면 축제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것을 염두하신건지?

목차수준의 초안으로 설명이 붙는 것을 예상하고 진행했다.

-굳이 도시와 농촌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농촌보다 도시에 대해 알고 있어서 도시 쪽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진행된 것 같다.

-정말 그런 것 같다. 총평에서 너무 도시 중심적으로 써진 것 같다. 전체적으로 마을 정체성, 가치, 방법론, 구성원, 다양성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6장을 읽어보면 귀농민은 있는데 농민은 없었다. 그런데 전반적인 기조는 서울을 대상으로 보면 의미가 있지만, 전국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때는 다른 것 같다.

글 자체가 60, 70년대에 시작된 도시화에 대한 문제점으로 서울 관점에서 시작한 것이긴 한데, 각 장마다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둘 다를 녹여내는 게 좋겠다. 사실 농민을 농촌이라는 큰 범위 안에서 생각하고 5장에서 다뤘다. 그래서 이 장에서 농민이란 표현을 뺀 것이다.

-문제가 다르면 방법론도 달라질까?

지금 상태로는 농촌의 마을은 마을로서의 도시의 비해 허술하게 작성될 여지는 있다.

-문제가 다르면 분명히 방법론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농촌에는 젊은 사람이 없다. 마을을 만들어도 사람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농촌의 마을만들기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으로는 마을의 활동 기본적인 구성원이 없다. 이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31조에 그런 문제의식이 들어있긴 하다.

-공론장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활성화 할 것인가? 같은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도 차이가 날 것이다. 산내 공동체에 가서 강의를 들었다. 도시의 마을만들기는 시설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 공론장의 개념이 공간으로 의미가 맞혀질 수 있다. 도시에서는 공간, 시설로 얘기 될 수 있다. 하지만 농촌은 이야기적인 부분이 큰 것 같다.

-15조에, 마을만들기 활동은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인데, 개인의 욕구가 아니라 공동체적 방식으로 충족하는 것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주민들과 함께“ 구절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의 방식을 공동체적 방식으로 접근해서 표현하는 것이 좋겠고 특히 ‘함께 해결’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표현해보겠다.

-3장 전체에 대해 핵심은 관계망을 통해서 공론장을 만들어 각 영역의 의제를 다루어나가자라는 것 같다. 그런데 관계망 형성의 구체성을 얘기하기 그렇지만, 마을주민의 교육이 마을주민 공동의 가치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는 관계망 형성의 방법론을 구체화시켜주는 하나의 접근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학습이 없고 그 교감까지 없어서 아쉽다.

-그렇지만 왜 주민들이 교육의 대상이 돼야 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있다. 민-민 민-관에 대한 위치 설정의 전제의 문제일 텐데, 그에 대한 정리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16조에서 ‘공동체적 생활 관계망’은 동의반복이다. 생활관계망보다 마을운동은 마을공동체의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생활에 강조하신 것은 이해하는데 공동체성의 회복으로 분명하게 표현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공동체성의 회복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래된 세월을 통해서 세대를 지나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공동체성의 회복을 분명히 지향해야 하지만, 활동을 하는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역시 생활 영역에서 잡히는 공동의 가치가 더 핵심적인 것 같다. 예를 들면, 구도심 활동화에서는 개별적 가치 상승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제는 지원금이 공동체, 마을주민간의 주체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단계가 넘어가는 것이다. 농촌의 공동자산을 공유되듯. 공동의 가치 상승을 먼저 이뤄졌으면 좋겠다.

-도시에서도 공동자산에 대한 이해를 기조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공동체성 회복보다 생활관계망이지 않을까 싶다.

마을이라는 것은 자기 필요에 따른 관계로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연결망을 확장해나가다 보면, 결국 공공성을 증빙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다. 사실 젠트리피케이션도 땅값만이 오르는 게 아니라 사적 이해관계에서 공적 이해관계로 넘어가는 문제이다.

이게 바로 시민성으로 얘기한 것이다. 마을주민의 시민성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기대해야 하는 데 이 부분은 계몽적인 관점으로도 다가갈 수도 있다. 그래서 공론장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민주시민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민주적 공론장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다. 이 고민을 선언 상에서는 그런 표현으로 하고 있다.

-방법론과 원칙이라는 방법론에서 주민들의 자발성, 주민의 의한 주체성, 자립의 원칙이 이 안에 들어가면 좋겠다.

도시재생과 마을경제(시의적인 이슈)에 대한 방법론적인 논의

-도시 재생은 도시만이 아니라 농촌도 있었으면 좋겠다.

<세부논의내용>

-구도심 쪽에서 마을 운동은 도시재생 관련해 고민이 많다. 국비든 어쨌든, 예산으로 나와 진행하면서, 주민주도, 주민참여라는 말이 유행처럼 나오는데, 전문적인 용역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정말 주민에 의한 도시재생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이 이 장에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

또한 여수 원도심에서 스카이라드라는 재생활성화 프로젝트로 많은 돈을 투여했는데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다. 실제로 가게의 수익이 올라가지 않았고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 세입자는 떠나게 됐다. 재생의 관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까지 방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방법론 16조는 사실 마을 현장에서 꾸준히 나온 말들인데, 도시재생은 요즘 뜨는 사회현상 같아서 기조성으로 구분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안 맞는 것 같다. 사실 ‘살림살이의 경제’ 홍기빈씨가 이야기 한 것은 사실 아리스토텔리스부터 얘기한 개념인 것처럼, 젠트리피케이션도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문제이고 예상된 문제였다. 그 문제가 마을 활동으로 인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주로 논쟁 과정을 다 적고, 다음 회 선언에 이어지면 좋겠다. 원칙과 기조는 구분돼야 그 다음에 논의가 가능하단 싶어서 기조로 분리해 냈다.

-도시재생하니까 농촌을 배제한 것 같다.

확실히 그런 측면이 있다. 지역재생, 마을재생의 맥락은 도시화 이후에 철거 신축방식이 불가하면서 우리

도시미래적인 부분으로 나온 것이다. 분명히 농촌사회재생의 개념도 어떻게 담을 지 고민해야 된다.

도시재생 뿐만 아니라 마을경제 영역인, **18조**도 농촌은 농업이라는 생활기반이 가능하다라고 기초가 깔려 있고, 도시별로의 생활기반의 특징이 다름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이 됐다.

-경제가 어려워 살림살이라는 표현이 농촌에 맞는 것 같은데, 도시의 경우 수많은 직업군이 난무하는 곳에서 이 개념이 맞는가 싶다. **18조**만 해도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거기까지 가지 않은 전 단계 개념이다.

- 또한 '살림살이 경제'가 동어반복이다.

돈벌이경제와 구분하다 보니 썼다. 오히려 생활의 경제, 삶의 경제도 좋겠다. 그래서 **6명**이 있지만 대표 집필이 한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살림살이 경제, 지역순환 경제 등. 용어가 모이는 게 좋겠다.

민관협력과 시민생태계(다양한 층위의 행위자들의 결합의 장으로서 묘사)에 대한 논의

-거버넌스에서 통치라는 표현이 좋지 않다. 행정이 민을 지원하는 표현으로 강조됐으면 좋겠다.

<세부논의내용>

20조, 21조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20조** “그 동안의 위계적 통치적” 표현이 핀트가 어긋났다. 공무원들에게 내용적으로 위계적 통치적 표현보다는 행정에서의 관점 문제는 마을관리에 대한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다! 보조금은 관리할 수 있지만 마을만들기는 안된다. 행정은 지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해야 한다. 어떻게 말하면 위계는 관료제의 특징이긴 하지만 마을도 위계적 방식이다. 그전에 나이 드신 촌장과 어른의 위계적 관계를 인정했었기에... 그런데 위계가 현실이긴 하는데 위계라는 표현의 방식, 바라보는 관점이 마을답게 다루어져야 한다. 오히려 어른의 존중 받지 못해 문제가 일어나기도 한 것 같지 않은가!

21조 생태계라는 표현이 다양성, 불균등성이 모여 융합하는 취지로 표현했다. 보통 생태계는 토양, 환경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태계의 분위기가 다르긴 하다. 다양한 주체들이 따로 또 같이 협업하면서 자기조직화가 가능한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외생변수에 휘둘리지 않고.., 마을이 섞일 수 있는 그릇될 수 있을 것 같다.

마을선언 활용에 대한 의견

-이 장은 마을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하고 건강하게 하려면 뭐가 좋을까?라는 이야기가 진행됐다.

-총평은 이 시도가 아주 신선했다 였다. 이것을 교재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분이 좋았다.

-전체적으로는 개념과 문투가 너무 들쭉날쭉 이어서 대표 집필이 **1인**이었으면 좋겠다.

<세부논의내용>

-마을선언의 시도는 굉장히 참신하다.

-마을만들기에 관한 선언문을 바탕으로 이 다음 단계에 대한 우선순위를 나열하고 현실과 가까운 것부터 논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보면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이 안에 녹아 있음을 느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에 관한 교재로 느껴졌다.

-**5년**마다 버전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좋겠다.